

## 17-18세기 조선의 구휼을 통해 본 공동체성

윤원희 성균관대 동아시아학과 박사수로

### 논문초록

17세기의 조선은 전란과 재해가 상시적으로 있으면서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런 가운데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구휼이다. 구휼은 한 사회와 국가의 근간인 백성들의 생존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국가·사회 존속의 중요한 제도였다. 구휼은 국가 행정의 제도이자 지역사회 공동체에서 사족과 민들이 함께 지켜야 할 문화 중의 하나였다.

17세기 이후의 조선에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지역의 사족층이 이전보다 구휼에 대한 역할이 축소되었다. 본래 사족층을 비롯한 지역의 유력자들은 지역사회에서 구휼을 감당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양란과 재해의 발생으로 인한 대기근으로 많은 민들이 떠돌게 되고, 심지어는 양반들도 굶주려 죽는 사람들이 속출했다. 이 시기에도 국가는 부유한 사족층에게 기부를 종용하여 구휼하는 재정에 보충하고자 했지만, 자신들조차 굶주렸기 때문에 기부할 수 있는 이들이 적었다. 따라서 국가 정부가 구휼을 감당해야 하는 비율이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사족층이 구휼을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목민서들과 향약 등을 살펴보면 국가의 구휼 비율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 동시에 여전히 사족층의 구휼에 대한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형식과 내용의 변화는 있지만, 여전히 사족들이 구휼을 감당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주제어: 생존 위기, 구휼, 재분배, 호혜, 사족

## I. 들어가며

2007년 WCC 세계선교협의회에서 도출된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오늘날 우리가 생명을 죽이는 문명에 봉착했으며, 따라서 관계성, 공존, 피조세계와의 조화, 정의를 위해 투쟁하는 이들과 연대하는 문명의 가능성을 시급히 탐구해야 함을 촉구했다. (올리히 두크로 · 프란츠 힌켈라메르트, 2018: 9) 2007년과 마찬가지로 혹은 이전보다 더 현시점은 코로나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경제 · 에너지 · 식량 위기가 발생하면서 전 지구적으로 생존에 대해 다시 고려해야 하는 시기인 것이다. 한편 한국은 보릿고개를 극복한 뒤로 굶주림과 생존위기에 대해 망각하고 관심이 사라졌지만 최근 코로나 및 자연재해들로 이와 같은 주제들에 관해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의 사각지대에 있는 극빈층들은 굶어 죽거나 생존에 위협을 느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

칼 폴라니에 따르면 ‘시장사회 이전의 질서, 즉 전통적인 구빈법이 작동할 당시에는 고아 · 병자 · 미망인 · 노인은 기독교 공동체의 구성원이었고, 교구의 사회 구성원은 빈자의 생존을 책임져야 한다는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규범이 기능했다’라고 했다. 그런데 산업혁명과 시장 경제 시스템이 탄생하면서 공동사회가 붕괴하고 빈곤이 자연법칙처럼 여겨졌다. 이와 같은 시대 흐름 속에서 기독교인들 다수는 시장사회에 대해 신학적으로 긍정하고 종교가 경제생활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웃의 빈곤 문제에 대해 외면하게 되었다고 했다. (와카모리 미도리, 2017: 69, 72)

산업혁명과 시장 경제 시스템의 도입으로 생긴 변화를 시작으로 현재 신자유주의 경제가 주류 경제 시스템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빈곤 문제에 대해 개인의 자선 문제 정도로만 치부하거나 빈곤한 사람들에 대해 나태, 노력의 여부로 보는 시선도 상당수 존재한다. 물론 상당수의 국가 정부들이 사회복지 정책으로 저소득층과 극빈층에 대해 구제하고자 하지만,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사각지대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

위기가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공동체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서구에서 시장 중심사회로 도래하기 이전에 기독교 공동체, 교구에서 빈민들의 생존을 책임졌던 것이 지금의 시스템과 체제에서 불가능한 사례일까? 아니면 새로운 공동체를 설계하고 지향해야 하는가? 우선 구약 속에 나타난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살며 번영을 누릴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언약공동체 유지를 위한 경제활동에 현재로서는 경제활동으로 보지 않는 ‘이웃을 돕기 위한 사회부조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김희권, 2022: 224-225)

이 글에서는 전란과 재해로 인해 생존위기가 일상이 된 17세기 조선의 구휼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구휼은 조선뿐 아니라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에서도 행해졌고 이전 시대에도 행해졌다. 구휼은 단순히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정치 행위 중의 하나가 아니라 한 사회와 국가의 근간인 백성들의 생존을 보장하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중요한 정치적 행위이자 경제적 보장이었다. 정부는 물론이고 지역 공동체의 유력층들을 중심으로 구휼행위가 이뤄지고 있었다. 그런데 구휼이 17세기 전후로 양상이 달라졌다. 임진왜란·정유재란, 두 차례의 호란까지 약 40년 사이에 전란이 생겨 전 국토가 황폐해지고, 소빙하기 기후로 인해 재해가 끝없이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 구휼 역시 달라져야만 했다. 구휼의 변화와 그 속에서 지속된 부분을 중심으로 지역-국가 공동체에서 어떻게 생존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구제했는지 살피고자 한다.

## II. 국가의 구휼 비율 증가

17세기 조선은 한·중·일 삼국이 전쟁과 소빙하기 기후 변동으로 인한 재해 등으로 요동치는 가운데 큰 변화를 맞게 되었다. 첫 번째는 양란(兩亂)으로 불리는 왜란과 호란 등의 전쟁으로 전 국토는 황폐해지고 모든 경제적 기반이 파괴되었다. 왕을 비롯한 지배층은 전쟁에서 패배하고 백성을 지키지 못하는 무능력한 모습으로 민심의 이반(離反)을 불러왔다. 따라서 17세기 조선 정부는 재건해야 하는 책임과 더불어 국가를 지배할 수 있는 명분을 되찾기 위해 노력해야 했다.

전쟁과 더불어 17세기 조선 사회를 뒤흔든 것은 기후 변동으로 인한 재해였다. 소빙하기 기후로 인한 재해는 조선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서도 일어난 공통적인 현상이었다. 물론 기근은 가뭄, 수해, 풍해, 병충해 등 자연재해 등의 요인으로만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체로 가뭄이 기근으로 이어지며, 기근은 주지하다시피 먹을 양식이 모자라 인간이 생존할 수 없는 조건에 처해 있음을 이야기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지역이 기근에 처한 경우는 아주 드문 사례에 속하며, 한 도(道) 내에도 기근이 든 지역이 있는가 하면 피해가 덜한 지역이 있어 식량 공급에 문제가 없는 것이 보통이다. (김덕진, 2008: 32-33)

그런데 17세기 조선의 기근은 좁은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기근을 넘어 대기근이 자주 발생한 것이다. 대기근은 사회 전반을 흔들 수 있는 요소이다. 자연적 요인뿐 아니라 전쟁을 비롯한 인적 요소들로 인해 기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곳곳에서 붕괴되었고, 그 피해는 하층민을 비롯한 거의 모든 백성이 생존에 위협을 느끼게 된 것이다. 당시의 피해 규모를 볼 수 있는 부분은 재해에 따라 조세를 감해주는 재결(災結)의 증가와 재해가 집중된 연도에 호적 호구 총수가 감소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우선 지역사회에서 전보다 지역의 유력층이 구휼을 행하는 비중이 축소되었다. 본래 사족층을 비롯한 지역의 유력자들은 지역사회에서 구휼을 감당해야 지역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영주는 '백성성립'을 보증하기 위해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었고, 이때 그것을 표현하는 일반적인 개념으로 무육(撫育)과 무민(撫民)을 사용했다. 그리고 백성들은 약정(約定)을 근거로 영주에게 계속 '구제'를 요구했다. (후쿠야 가쓰미, 2017: 27·42) 그런데 이것은 일본만의 이야기가 아니며 구체적인 양상만 다를 뿐, 인류 보편적으로 지역의 유력층은 지역 내 사람들을 굶기지 않고 살려야 하는 의무를 행해야 했다. (정승진, 2008)

특히 인정(仁政) 이데올로기를 강조하는 국가인 조선에서 그 이데올로기를 일상에서 구현해야 하는 주체인 사족은 지역민들의 생존위기를 구해야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했다. 사족이 구휼의 역할을 이전과 같이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은 양란과 재해로 인한 전 국토의 황폐화로 인해 곡식을 축적하고 있었다고 해도 지속되는 기근에 하나둘씩 파산하였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양반 중에서도 굶주려 죽는 사람들이 속출했다. 이 시기에도 국가는 부민을 비롯한 사족층에게 기부를 권고하여 구휼하는 재정에 보충하고자 했지만, 자신들조차 아사(餓死) 위기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에 선뜻 기부할 수 있는 이들이 없었다. 다음의 자료는 당시의 심각한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이경석이 아뢰기를, "위에서 굶어 죽은 자를 특별히 물으시니 백성을 근심하는 뜻이 지극합니다. 신이 듣고 본 바로써 진달하겠습니다. 신이 들으니, 어떤 부인이 혼자 살고 있었는데, 굶어서 죽게 되던 날 비통한 말을 벽에 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용궁(龍宮) 등지의 행상(行商)이 한 양반의 집에 들러 밥 지을 쌀을 주었는데, 시간이 오래되어도 밥을 지어 주지 않으므로 상인이 그 밥을 달라고 하였더니, 답하기를 '굶은 지가 오래되어 아이들이 앞을 다투어 밥을 가져가는데 차마 빼앗지 못해서 이미 다 없어졌다.' 하고, 옷으로 보상하기를 청하였는데, 상인이 불쌍히 여겨 받지 않고 양식을 나누어 주고 갔다고 합니다. 그 뒤에 그 상인이 그 마을에 다시 가서 물어보았더니, 이미 굶어 죽었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수령이 그 녹봉으로 온 경내의 백성을 두루 구제할 수는 없으나, 이처럼 호소할 데가 없는 무리가 그 지방에서 굶어 죽는 데도 듣고 보면서 구제하지 못하였으니, 수령된 자가 몹시 통한스럽습니다. 사족이 감히 문을 나가 빌어먹을 수 없어서 이에 이르렀으니, 참으로 불쌍합니다. 부인으로서 굶주리는 자에게는 건량(乾糧)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참으로 몹시 놀랍고 참혹하다. 본도의 감사로 하여금 조사하여 처치하게 하라." 하였다. (『인조실록』 38권, 인조 17년 3월 25일 기사)

본문에서 인용한 자료는 1639년으로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난 지 3년 후의 자료로 전란과 흉년이 연이어서 발생하면서 많은 백성이 굶주려 죽을 때의 자료이다. 그나마 형편이 좋은 사족이 굶주려 죽었을 정도이기 때문에 일반 민의 사정은 더욱 처참했을 것이다. 이처럼 사족들이 구휼에

서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중앙 정부를 중심으로 구휼의 역할을 재정비하고자 했다. 전쟁으로 인한 민심의 이반으로 다시 통치할 명분을 찾아야 했으며 대동법을 비롯한 조세 개혁 정책을 통해 백성들의 생산기반을 보장하고자 했다. 조선의 정부는 본래 민본(民本)의 실현을 위해 권농정책을 추진해야 했는데, 단지 부세의 경감책이나 권농정책만으로는 재생산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국가가 구휼을 담당해야 했다. (이현창, 1996: 461)

이처럼 국가가 구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게 된 변화를 볼 수 있는 부분은 법전의 조항 변화이다. 구휼의 경우 구휼이 조목에 명시된 비황(備荒) 조목뿐 아니라 무농(務農), 수세(收稅), 창고(倉庫) 등 다양한 조목에 포함되지만 이 글에서는 비황(備荒)과 요부(徭賦) 조목을 보고자 한다. 우선 비황 조목부터 살펴보면 우선 성종 때 반포된 경국대전에 “여러 고을에서 백성들에게 매년 구황물(救荒物)을 준비하게 하고, 수령이 진휼과 구제에 신경 쓰지 않아서 기민(飢民)이 많이 죽었음에도 숨긴 경우 논죄한다”는 조항이 있다. 경국대전 단계에서는 구황물을 준비하는 주체는 일단 백성이며 관의 수령은 진휼과 구제에 힘쓰고 민들이 죽었음에도 보고하지 않으면 처벌한다고 되어 있다. 실제로 구휼을 준비하는 것은 백성이며, 수령은 굶어 죽은 자들에 대한 보고의 여부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18세기 영조 대에 반포한 속대전을 보면 “각 고을의 진곡(賑穀)은 매년 힘에 따라 준비하여 저장하고, 새로 비축해야 할 수량은 매년 말 감영에서 비변사로 보고한다”, “여러 도의 해안에 창고를 설치하여 곡물을 쌓아두며 인접 도가 흉년을 만나면 이를 실어내어 구제한다”라고 되어 있다. 비황 조목의 구체적인 사항이 이전 법전보다 증가했을 뿐 아니라 법전 속에 명시된 진휼의 주체는 대체로 관에 한정되며, 각각의 지역을 관장하는 관에서 곡식을 비축해 불시의 재해를 대비하도록 했다. 요부 조목에도 선혜청에서 각영(各營)과 각읍(各邑)에서 1년간 지출할 액수를 계산하고, 나머지 쌀은 각각 고을에 비축해 두어 ‘불시(不時)’에 소요되는 공용에 쓸 것을 명시해뒀다. 속대전이 편찬된 시기의 불시는 대체로 전란보다 재해로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법전뿐 아니라 17-18세기에 수령의 지침서로 편찬된 목민서 역시 정부가 구휼을 행해야 할 역할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임관정요』의 「구휼」 장에 수령이 읍에 거주하는 사대부 혹은 청렴 근간한 자를 진휼도감에 임명하여 진휼에 관한 일을 맡기고, 『목민고』의 「치민(治民)」에서도 역시 부민(富民)이 나누게끔 중재하는 자 역시 관(官)인 수령이다. 이전에 사족과 부민이 같은 지역사회에서 생존위기를 겪는 민들을 구제하여 책임을 다했던 것에 비해, 이제는 지역을 관장하는 수령이 사족·부민들과 民의 사이를 중재하거나 부민을 진휼의 책임자로 임명한 것이다. 이전과 같이 사족과 부민들이 구휼의 책임자로 수행했지만, 이제는 관의 수령이 임명하여 사족에게 수행하게끔 한 변화를 볼 수 있다.

한편 실질적인 구휼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조세제도 개혁을 할 때 구휼을 위한 재정을 확보하고자 했다. 대표적인 것이 대동법 시행과정에서 확보한 저치미(儲置米)이다. 저치미는 다양한 용도, 특히 불시에 지출해야 하는 재정에 활용하기 위해서 지방 관청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재해를 비롯한 생존위기 상황에 많이 활용되었다. 특히 속종 연간 많이 발생한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진휼을 위한 비축곡이 전 시기보다 증가했고, 대동상납분을 제외한 저치미를 진휼에 사용하고 있었다. (문용식, 2000: 51)

이처럼 17세기 조선에서 호혜, 상호부조를 통한 구휼의 한 축이 역할이 감소하면서 정부가 재분배를 통해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구휼을 감당해야만 했다. 그러나 정부의 재분배만으로는 막대한 구휼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고, 정부가 일일이 백성들의 일상을 관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만으로는 굶주림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따라서 조선의 목민서와 향약 등에서 사족의 구휼 역할에 대해 지속해서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

### III. 지역 공동체에서의 사적(私的) 구휼

전통 사회의 공동체는 이상주의, 도덕 혹은 구시대의 유산 중 하나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 김필동에 따르면 ‘초기 사회학자들은 전통 사회에서 개인은 공동체에서 매몰되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고, 근대의 징표로 자립적인 개인의 성장과 좀 더 자유로운 집단·조직 활동으로 간주했다’라고 했다. (김필동, 2002: 18) 그러나 전통 사회의 공동체 속 개인이 공동체와 밀접하게 결부된 존재임은 확실하지만, 자유 없는 존재로 간주하는 것은 선입견이다. 그리고 위기가 일상이 된 시대에 공동체 밖에 존재하는 개인은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생명의 위협에 노출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공동체를 중심으로 생존위기를 보장하고자 하는 부분을 수령의 지침서인 목민서와 사족들이 제시한 향약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목민서는 수령에게 지역을 다스림에 있어서 다스림의 자세·마음가짐과 더불어 실제 행정 사항을 항목별로 제시한 지침서이다. 목민서는 수령을 대상으로 하는 책이지만 편찬자들은 대체로 수령을 역임한 사족들이며 결국 수령이 될 사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책이다. 조선의 목민서는 자체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고려 말부터 중국에서 수입되었다. 특히 조선에 영향을 끼친 중국의 목민서는 송대 진덕수가 지은 『정경』과 명대 주봉길이 지은 『목민심감』이었다. 이 글에서 살펴볼 자료는 중국 명대 주봉길이 저술한 『목민심감』이다. 『목민심감』은 중국에서 간행됨과 거의 동시에 조선에 수입되어 간행 및 유통되었고, 조선 초기에 지방 수령들의 필독서로 여겨졌다.

『목민심감』의 서문에서 ‘목(牧)’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맹자』 ‘공손추’ 편에 실린 소와

양 비유, “지금 남의 소와 양을 맡아 그 주인을 위해 길러주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소와 양을 위해 목장(牧場)과 꼴을 구할 것이니, 목장과 꼴을 구하다가 얻지 못하면 그 주인에게 소와 양을 돌려주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또한 소와 양이 죽는 것을 서서 보고만 있어야 하겠습니까?”를 빌려왔다. 목민관은 하늘이 내고 천자가 맡긴 백성들을 보살피야 한다고 역설했다.

보살피는 도리의 첫째로 언급한 것이 백성들을 굶겨 죽게 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선화」편의 빈곤한 사람들을 구휩하는 조항인 ‘홀빈곤(恤貧困)’을 보면 “백성 가운데 불행하여 나면서부터 빈궁한 자가 있으면 나의 인(仁)을 미루어서 덕으로 구휩해야 한다”, “내가 백성의 부모가 되어 마음으로 근심하여 그들을 위해 구제해서 그 의식을 넉넉하게 한다”, “질병이 있으면 치료해 주고 어려움이 있으면 한 사람도 안주할 곳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없게 해야 한다.” 등이 있다. 제도적인 구휩의 방법보다 목민관의 ‘수기(修己)’에 해당하는 인(仁)과 덕을 통해 구휩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특히 「교인」편의 주환난(周患難) 조항에 사람이 환난 가운데에 있을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그 환난에서 나올 수 없으므로 곤궁한 사람이 찾아오면 제지하지 말고 구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서 환난은 재해를 포함하여 사람이 겪는 모든 환난을 칭하는 것으로 보이며, 환난을 겪을 때 목민관이 공적으로 해결하기보다 사적으로 곤궁에 처한 사람을 구제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목민심감』의 저자가 공적 영역의 구휩만큼, 혹은 그보다 더 사적 영역의 구휩과 구제가 중요함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선의 목민서는 15세기부터 효시가 되는 글들이 나타났지만, 본격적으로 유통된 것은 정철과 이이의 글, 그리고 이후 『선각』에 실린 이원익이 조카인 이덕기에게 보내는 편지글이었다. (김선경, 2010) 이후 17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조선의 현실을 반영한 목민서인 『선각』, 『임관정요』, 『목민고』, 『사정고』 등이 편찬되고 유통되었다. 중국의 목민서를 수용한 뒤에 오랜 기간 조선에서 목민서가 수령의 지침서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17세기 이후의 조선 목민서 역시 중국 목민서의 영향을 받았다.

조선의 목민서는 중국 목민서와 마찬가지로 구휩에서 목민관의 마음가짐을 강조하는 부분이 같다. 『선각』에 수령이 구휩의 정사를 행할 때 “백성을 어린 자식을 사랑하듯이” 하고, 『목민고』 역시 “백성 보기를 병들고 허약한 고아를 돌보듯이 한다면 정치를 그르칠 근심이 없다”라며 수령의 마음가짐을 강조했다. 즉, 수령이 구휩의 정사를 행할 때 가장 먼저 백성을 어린 자식처럼 혹은 약하고 병든 이를 돌보듯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령의 개인적인 마음가짐이 인(仁)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치인(治人)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통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양란과 재해로 인해 많은 변화를 갖게 된 17세기 이후의 조선에서 편찬된 목민서들은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는 동시에 호혜, 상부상조를 여전히 강조하고 있었다. 17세기의 주요 목민서

속에 호혜-상부상조가 나온 구절들을 <표 1>로 정리했다.

목민서	구절
『선각』 「칠사제요(七事提要)」	(농사의 요체 6가지 중) 여섯 번째는 환난을 구휼하는 것이니, 재해를 구휼하고 이웃을 구조하여 진황(陳荒)이 생기지 않게 한다.
『입관정요』 「시조(時措)」 교화장(教化章)	집에 들어가서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밖에 나가서는 어른에게 공경하며, 재해를 구휼하고 어려움을 만나면 서로 구제하는 등의 일을 동약에 따라 거행하고, 이를 어기는 자가 있다면 벌을 준다.
『목민고』 「치민(治民)」	경작할 전토가 없는 사람에게는 부민이 나누어 주게 하고, 밭갈이할 소가 없는 사람에게는 이웃이 빌려주게 한다. 질병이 있는 사람은 이웃이 돕게 하고, 게으른 자는 벌을 주어 농사에 힘쓰게 한다. (중략) 반드시 호민(豪民)이 그 친척과 이웃을 구조하게 하고, 곡식을 빌릴 때의 이자는 일정한 규정을 정하여 엄격하게 시행한다.
『목민고』 「오가통사목(五家統事目)」	다섯 집을 모아서 이웃으로 만들어 논밭을 갈고 김을 매는 일을 서로 돕게 하고, 나가고 들어올 때 서로 지키며 병이 있으면 서로 구호한다.

<표 1> 17-18세기 조선의 목민서 속 상부상조 내용

<표 1>의 목민서 내용은 변화된 조선의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상부상조의 내용이 담겨있다. 일단 17세기 이후 관과 수령의 역할이 증가하면서 수령이 지역의 유력층과 민 사이의 매개자 역할을 함과 동시에 본래 사족이 맡고 있던 교화의 기능을 수령이 맡게 되었다. 수령이 교화를 통해 이웃 간의 상부상조를 감독하고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상벌을 주관한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비록 수령이 교화의 방법으로 상부상조를 감독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족과 지역 유력층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웃 간에 도울 것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조선의 향약 속에서 나타난 호혜-상부상조를 보도록 하겠다. 기존 선행연구들을 통해 향약은 사족들이 향촌 사회를 통제하고 지배하기 위한 도구로써 인식됐지만, 향약의 조항들을 보면 통제와 지배의 목적을 넘어서 함께 생존하기 위한 목적 역시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민들의 생존을 보장해야 지역을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음을 사족들이 알아서 향약 속에 생존을 보장하는 호혜-상부상조 조항들을 기록했다는 것이 타당한 해석일 것이다.

향약은 본래 중국의 『여씨향약(呂氏鄉約)』이 주자의 증손(增損)을 거쳐 조선으로 들어왔다. 그런데 향약이 중종 대에 보급되기 시작하고 명종 대에는 『여씨향약』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변용하여 수용했다. 퇴계의 『예안향약』 경우 향약 4조목 가운데 과실상규(過失相規)만을 지정했으며 율곡의 향약들 역시 『여씨향약』을 참조했으나 형식과 내용 모두 달랐다. (정진영, 2013) 그런데 17세기로 들어서면서 조선의 향약들은 새로운 방향으로 정립되기 시작했다.

17세기 이후 향약들은 『여씨향약』과 퇴계의 『예안향약』을 모방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조문들을 비교하면 퇴계의 제자인 『김기향약』에 더 많이 영향받은 것을 알 수 있다. 『김기향약』은 근처 안동 지방의 현실을 넘어 보편타당한 방책이었기 때문에 후세에 더 넓은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김용덕, 1990: 113) 김기는 퇴계의 제자로 퇴계 향약을 모범으로 하여 향약을 작성했다고 했으나 퇴계의 향약과 다른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다. 『김기향약』을 분석한 김용덕에 따르면 『주씨증손여씨향약』에 있어 「예속상교(禮俗相交)」 조에 포함된 상례(喪禮)에 관한 사항을 「환난상휼(患難相恤)」 조로 옮긴 것이 『김기향약』의 특색인 동시에 상을 당하면 이웃의 도움이 필요했던 당시 향촌의 가난한 실정을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김용덕, 1990: 108)

한편 김기의 문집인 『북애집』을 보면 김기가 임진왜란 당시에 군량미를 모으기 위해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글이 수록되어 있다.

얼핏 소문으로 들으니 명군이 아침저녁으로 대거 온다는데 군현에는 곡식이 없다는 게 고을에서 부끄러운 점이라네.  
식량을 사려 해도 살 곳 없으니 어찌 곡식 모을 수 있겠는가. 이에 곡식을 모으기로 의논하고 선비 평민 가리지 않았네.  
가난하면 억지로 못 따르고 부유해도 함부로 못 정하네. 어떤 이는 가축과 쌀을 어떤 이는 콩과 보리 내었네.  
스스로 헤아린 것에 따라 어찌하여 (원문빠짐) 할 수 있나. 많이 쌓아두고 적게 남은 공론을 두려워할 만하네.

전란으로 인해 명나라 군대가 원병으로 와서 군량미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에 군현에 곡식이 없자 김기는 선비와 평민, 즉 신분을 가리지 않고 마을 사람들 모두 함께 곡식을 모으기로 의논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많이 쌓아두고 적게 낸다면 공론(公論)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이다. 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전란의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는 김기가 마을 공동체 중심으로

환난을 극복하는 조항을 향약에 실어놓은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인다.

다음으로 『김기향약』의 4조목 중 하나인 「환난상휼」을 보면 <표 2>와 같다.

<p>1. 상례(喪禮)</p>	<p>향약에 동참한 사람들 가운데 喪이 있으면 상하가 모두 모여 가서 조문하고, 호상(護喪)과 유사(有司) 1인, 하유사(下有司) 2인을 정하여 초상을 보호하고 장례 시에도 또한 그렇게 한다. 사족이면 각자 건장한 남자 중 2명을 내고, 소민이면 역부 1명을 내어, 혹은 물건을 매거나 들고 혹은 무덤을 조성하게 한다. (중략) 소민들의 상에는 향약에 동참한 사람들이 모두 모여 가서 조문하고, 하유사 2인을 정하여 상을 보호하게 하고, 사족은 건장한 남자 중 1명을 낸다. (중략) 상가에서 술과 음식을 갖추어 조문객을 대접할 수 없으면 조문객 또한 대접을 받지 않는다. 매년 10월에 쌀과 콩을 거둘 때 많아도 5되를 넘지 않고, 적어도 2되를 내야 한다. 빈 거적매기 두 닢씩을 내어 별도로 보관해 두고, 이정(里正)으로 하여금 차례대로 행하게 하여 상(喪)이 나면 쌀 8말 혹은 6말, 콩 5말, 빈 거적매기 5닐을 헤아려 내어준다. 오직 부모상과 자기 자신 및 처상 외에 그 나머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p> <p>퇴계선생의 약조에는 ‘각각 쌀과 콩을 각 5되씩, 상지(常紙) 1권, 빈 거적매기 4닐, 부역할 중 2명을 낸다’라고 하였는데, 지극히 중도를 얻는 것이다. 그러나 다만 가난한 백성들을 생각하면 그들에게 쌀 한 되를 그 궁핍한 상황을 만나서는 또한 갑자기 마련하기 어렵고 혹은 부조를 할 때 그 양이 들쭉 날쭉함을 면치 못하리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후략)</p>
<p>2. 화재, 도적, 전염병 등 환난을 만났을 때</p>	<p>향약에 동참한 사람들 가운데 화재가 있으면 상하가 구원하고 위로하는데, 각자 빈 거적매기와 이영(蓋草)과 장목(長木)을 내어 힘을 합쳐 집을 짓는다. 도적이 들면 서로 구원하고, 질병이 있으면 서로 위문한다. 만약 전염병이 들어 농사일을 하지 못하면 향약에 동참한 사람들이 상하를 통하여 각자 농군(農軍)을 내어 혹은 밭을 갈거나 씨를 뿌리거나 김을 매거나 수확을 해주며, 환과고독이나 불치병에 걸린 사람 중에 의탁할 곳이 없는 자도 아울러 긍휼히 보살피어 거처를 잃는 데까지 이르지 않게 하며, 가난하여 시기가 지나도 혼인하지 못한 처자와 외롭고 약해서 배울 기회를 잃어 귀의할 곳이 없는 고아는 모두 관사에 보고하거나 혹은 향약에 동참한 사람들이 통문(通文)을 돌려 선처를 의논한다.</p>

<표 2> 『김기향약』 「환난상휼」 조목 내용

『김기향약』의 「환난상휼」 조목 속에 나타난 호혜-상부상조는 우선 공동체에서 기금을 마련하여 혼인에서 상례까지 일상 속 관혼상제를 치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리고 화재, 도적, 전염병 등 불시에 찾아올 수 있는 환난 등에 개인이 홀로 대처하기보다 공동체 안에서 대처하고 있다. 특히 전염병으로 농사를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대신 농사를 지어서 식량을 확보하게끔 했다. 이것은 단순히 돕는다거나 구제의 개념보다 생존위기가 일상이 되면서 ‘누구든지 이런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의식'이 생겼고, 공동체 속에 상부상조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해 상부상조를 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1)</sup>

17세기 이후의 향약들에 영향을 미친 『김기향약』은 전란을 마을 공동체가 함께 극복하고자 했던 경험을 토대로 작성되었고, 전염병, 재해, 기근 등의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호혜-상부상조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것이다. 일례로 『김기향약』의 영향을 받고 입의(立議) 18조를 추가한 『밀양향약』을 보면 고아·과부·유민 중 의지할 곳이 없는 자들에게 동내(洞中)에서 곡물을 모으고 집(家舍)을 수리하여 생존할 수 있게 돕게끔 하였다. 그리고 동(洞)에서 도울 여건이 안 되면 관에 보고하여 조치를 받게끔 하였다. 먼저 지역 공동체에서 환과고독(鰥寡孤獨)처럼 의지할 곳이 마땅치 않고 항시적으로 생존에 위협을 받는 이들의 생존을 도모하며, 지역 공동체의 힘이 못 미치면 관의 도움을 받게끔 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요컨대 17세기 이후의 조선은 양란과 재해의 반복으로 피해를 겪고, 관의 구휼 역할은 증가한 동시에 지역사회의 유력층인 사족이 구휼을 감당해야 하는 역할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사족층이 쓴 목민서와 향약을 보면 사족층이 구휼의 역할을 감당하고 지역 공동체에서 호혜-상부상조 요소를 이웃 상호 간에 감당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호혜-상부상조를 강조한 것은 국가의 재분배와 행정만으로 구휼을 감당할 수 없으므로 구휼의 한 축인 호혜-상부상조 역시 있어야 생존을 도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 IV. 나가며

지구 시스템 과학자들이 '인류세'라는 개념을 창안한 이래 '인류세'라는 개념은 지구 시스템 전반의 기능에 인간으로 인한 균열이 일어났으며, 이 균열로 인한 변화로 인해 새로운 지질학적 세가 시작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클라이브 해밀턴, 2018) '인류세'라는 새로운 지질학적 세는 17-19세기에 소비하기 기후로 인해 전 세계의 역사가 큰 변동이 생겼으며 전 지구적인 위기에 처했던 역사를 비춰 본다면 새로운 지질학적 세는 더 큰 변화와 위기가 다가올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다. 최근 전 세계에서 이례적인 가뭄, 한파, 홍수, 화재 등 자연재해 등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식량 물가의 상승과 경제 위기 등의 소식을 들으면 '인류세'의 경고가 과한 경고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자연재해의 연속적인 발생뿐 아니라 시리아 내전과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 등 전쟁의 연속적인 발생, 대규모 전쟁 위협, 광범위하고 치명적인 전염병 주기의 단축,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전 세계 경제위기의 위험 등 무수한 위기의 연속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1) 호혜-상부상조적인 전통은 「여씨향약」 등 중국에서 수용된 향약의 영향보다 생활 공동체로서 오랜 전통적 기반을 가진 촌계(村契)들에서 행해진 상부상조의 전통 영향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해준, 1990)

더 심각한 문제는 현대 사회의 주류 시스템이 자유주의-신자유주의 경제에 기반을 둔 경제 시스템으로 무한정 경쟁과 경쟁에서 도태된 이들에 대한 방임이다. 그리고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반대할 뿐 아니라 공동체와 이웃에 대한 무관심을 정당하게 여기고 있다.<sup>2)</sup>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는 위기가 일상이 된 시대, 죽어가는 이웃에 대해 방임하는 흐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 17-18세기 조선에서의 구휼의 변화와 변화 속에서 나타난 지속된 흐름을 살펴봤다.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상하를 막론하고 잦은 자연 재해의 발생으로 인한 기근으로 굶주리고 죽으면서 호혜 - 상부상조는 점차 어려워지고 대신 국가에서 재분배를 통해 구휼의 역할 비중을 더 감당하게 되었다. 그런 상황에서도 사족들이 편찬한 목민서와 향약을 보면 여전히 호혜 - 상부상조적 요소를 강조하였고, 지역의 유력층인 사족들에게 최대한 지역에서의 구휼을 감당할 것을 요구했다. 이것은 생존 위기에 내몰려 죽어 가는 이들을 위한 구휼이 공동체 내에서의 호혜-상부상조적 요소와 국가 공동체의 재분배적 요소가 함께 이뤄져야 했음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필자는 조선시대 구휼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위기를 효과적으로 벗어날 수 있었던 '유토피아' 같은 사회라고 보지 않는다. 다만 생존의 위기인 시대에 시스템적으로, 사상적으로 구휼을 보장하고자 했던 노력들을 보고자 한 것이다.

국가의 힘만으로 혹은 민간의 힘만으로는 생존 위기, 특히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살필 수 없다. 그리고 생존의 위기가 닥치면 초기에는 보통 극빈층들이 생존 위기에 먼저 노출되지만 거대한 위기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안심할 수 없다. 앞으로 생존의 위기가 일상이 되는 시대가 오기 전에, 혹은 이미 위기가 임박한 이 시점에서 지역 공동체에서 국가 공동체까지 공동체들의 역할을 재정비해야 한다. 지역 공동체의 일원이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야 하는 교회 공동체 역시 지역 공동체와 국가 공동체와 협력하여 이웃의 생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나아가 지역 공동체, 국가 공동체가 의도치 않게 소외시키는 이웃들까지 교회 공동체가 생존을 보장하는 역할을 맡음으로써 이웃과 공존하는 공동체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2) 칼 폴라니는 『거대한 전환』에서 국가 재분배의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국가의 역할이 무한히 커지면 전체주의로 흘러갈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 참고문헌

- 백승철 역. (2014). 『신편 목민고』. 해안.
- 원재린 역. (2012). 『임관정요』. 해안.
- 이영숙 역. (2019). 『북애선생문집』. 한국국학진흥원.
- 정호훈 역. (2013). 『선각』. 해안.
- 홍기은 · 전백찬 역. (2018). 『정경 · 목민심감』. 전통문화연구회.
- 김덕진. (2008). 『대기근, 조선을 뒤덮다 : 우리가 몰랐던 17세기의 또다른 역사』. 서울: 푸른역사.
- 김회권. (2022). 『자비경제학 : 구약성경과 하나님 나라 경제학』. 서울: PCKBOOKS.
- 손병규. (2018). 『19세기 지방재정 운영』. 파주: 경인문화사.
- 송양섭. (2015). 『18세기 조선의 공공성과 민본이념 : 손상익하損上益下의 정치학, 그 이상과 현실』. 파주: 태학사.
- 한형조 외. (2013). 『500년 공동체를 움직인 유교의 힘』. 파주: 글항아리.
- 향촌사회사연구회. (1990). 『조선후기 향약연구』. 서울: 민음사.
- 若森 みどり. (2015). 카를·폴라니의經濟學入門
- 김영주 역. (2017). 『지금 다시, 칼 폴라니』. 파주: 생각의힘.
- Polanyi, Karl. (1944). *The great transformation*
- 홍기빈 역. (2009). 『거대한 전환 : 우리 시대의 정치 · 경제적 기원』. 서울: 길.
- Hamilton, Clive. (2017). *Defiant Earth : The Fate of Humans in the Anthropocene*
- 정서진 역. (2018). 『인류세 : 거대한 전환 앞에 선 인간과 지구 시스템』. 서울: 이상북스.
- 深谷克己. (1993). 百姓成立.
- 배향섭 · 박화진 역. (2017). 『백성성립 : 일본 근세 농민의 위상과 농가경영』.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김선경. (2010). “조선후기 목민학의 계보와 『목민심서』”. 『조선시대사학보』 52. 157-196.
- 김필동. (2002). “한국 전통 사회의 공동체와 개인”. 『사회와 이론』 1. 15-48.
- 李憲稔. (1996). “朝鮮時代 國家의 再分配機能과 國內事業政策”. 『성곡논총』 27. 451-489.
- 정승진. (2008). “20세기 한국의 열린 촌락, 닫힌 공동체의 이미지”. 『한국경제연구』 22. 5-27.